

2. 정부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재평가 논쟁

- (내용)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음

- 정부는 30대 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99년 말까지 200% 이하로 할 것을 제시
- 기업들은 신용등급 향상, 외국인투자 유치, 해외 수주 등에 따르는 각종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하고 있음¹⁾

- (긍정적인 입장)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산을 현실화하는 것은 합당한 행위이며, 자금 조달 여건상 현 상황에서 재산재평가를 통한 부채비율 축소는 불가피함

- 사업 교환, 인수·합병, 기업 분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기업 현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
-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매각이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들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해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
→ 일본 기업들의 경우 350%의 부채비율을 200% 이하로 낮추는 데에 15년이 소요되었음

- (부정적인 입장) 실질적인 경영상의 호전이 아닌 회계장부상의 변화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기업에게도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

- 부채비율 제한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부상의 변화는 의미가 없음
- 자산재평가에 대한 세금 지출과 자본 가치의 상승에 대한 배당금 지출로 인해 장부상으로는 자본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는 현금이 유출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

1) “부채비율 = (부채/자기자본) × 100”이므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기자본의 가치를 높이면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됨. 통상 기업들의 장부상 자기자본은 상당 기간 전에 평가된 것으로 재산재평가 시 장부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

□ 정부 정책 동향 (11. 9~11. 15)

| | |
|---|---|
| <p>재정경제부(11.9):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%로 제한하는 새로운 여신한도관리제 2000년 1월부터 시행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기기로 IMF와 잠정 합의 - 한도초과분도 당초 일정보다 1년 6개월 앞당긴 2002년 말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할 예정 - 또 은행 자기자본의 10%를 넘길 경우 거액여신으로 간주하여 은행 총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, 초과분은 2000년 3월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하기로 합의 |
| <p>사업구조조정위원회(11.10) 5대 그룹 빅딜 평가 원칙과 우선 순위에 대한 지침통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빅딜 대상이 된 7개 업종의 사업 전망과 생존가능성부터 검토, 금융지원도 최소화 - 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채권단의 5대 그룹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평가 및 심사 실시 |
| <p>은행감독원(11.10) 내년 상반기 중 총대출한도제 도입 계획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이나 개인이 주채권은행을 정한 후 금융기관에서 빌려 쓸 수 있는 총대출한도를 지정받도록 한 제도 |
| <p>기업구조조정위원회(11.11)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새로 발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한계기업의 워크아웃 대상 선정 방지 -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채권단 관리를 받도록 하는 등 채권단이 경영전반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 |
| <p>건설교통부(11.11) 시화지구 일부 첨단공단 및 택지로 개발 발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화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시화호 및 간척지 3,483만 평을 반월특수지역으로 편입 - 북측 간척지 359만 평을 첨단산업 단지로 개발 |
| <p>건설교통부(11.12) 주택건설 및 건축 관련 규제개혁 과제 확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- 내년 3월부터 연면적 45평 이하의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 불필요, 4월부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제도 전면 철폐 등의 내용 |
| <p>공정거래위원회(11.12) 5대 그룹에 대한 2차 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3개 계열사가 21개 업체에 총 1조 4,927억 원을 지원한 사실 적발, 총 209억의 과징금 새로 부과 |
| <p>금융감독위원회(11.13) 자산유동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기관과 투자공사 및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은 상장기업 중 해외증권발행 실적이 있는 회사에 유동화증권 혹은 자산담보증권(ABS) 발행 허용 |
| <p>재정경제부(11.15)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이 1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|

(홍 성 민 hsamu@hri.co.kr ☎724-4034)